

“이상민 해임” vs “국조 보이콧”...여야 대치국면 격화

민주 “해임안 거부편 탄핵소추” 국힘 중진회의 보이콧 카드 논의 시한 D-3...예산안 처리 빨간불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법정 기한이 사흘 남은 내년 예산안 처리에도 맥구름이 드리워졌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 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행사할 경우 곧바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파상 공세를 폈다. 해임건의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 카드’를 공시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안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의결을 모았다.

다만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발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지도부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야권 공조가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주고 합의해 놓고 정쟁에 활용하고 정권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선 이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긴급 중진 의원 회의를 소집하는 등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적극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우리(국민의힘) 대응도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해임안 제출이) 원내대표단에 위임돼 있고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보이콧 여부는) 입장 유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접제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렇기 않아도 예산 심의가 원활하기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추진에다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외생 변수가 돌출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여론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하며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불모로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예산 심사에 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수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구속영장... 文 청와대 겨냥

“사안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리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숙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적극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훈 전 국방부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미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를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담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탈북여민 강제 복송 사건’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 중이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를 담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힘,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규제개혁추진단 “국회 규제 공장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9일 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야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

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일회성 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일회성 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특별비 공개 거부

시민단체 비용 등 정보공개 청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는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에 난색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특별비 공개에 대해서도 “발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출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복합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 무릎 |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